

광주지법 양형 적정성 도마...5·18 재판 지연도 질타

소촌동 지주택 사기·장윤기 사건 형량 적절성 쟁점
판결문 누락에 성범죄 무죄...양형조사관 확충 요구
5·18 왜곡 소송 장기화 비판...신속 재판 의지 촉구

국감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양형 적정성과 재판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백억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형량이 적절 한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으며, 판결문 누락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5·18민주화운동 왜곡 사건의 장기 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은 광산구 소촌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형량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건은 토지 확보율이 낮음에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분담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편취액은 약 188억원에 달한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괴고인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기 피해액은 약 76억원이며, 나

머지 피해액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사건은 쌍 방 항소로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 이다.

박 의원은 “형량이 징역 11년밖에 안 된다”며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충분하지를 따져 물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양형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광구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유족의 진술이 재판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윤상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법원장은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의 권한으로,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 도입은 중대한 형사정책적 사안인 만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조사 인력 부족과 판결문 작성·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은 광주 법원의 양형조사관이 2명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



장윤기 광주지방법원장이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다. 양형조사관의 법적 근거와 직위를 마련하고 인력을 확충해 재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누락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의 제간간 사건에서 판결문 누락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장 법원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판사들과 소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사건의 재판 지연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성윤 의원은 “46년이 지났지만 광주는 아직도 교통과 싸우고 있다”며 왜곡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고 전두환씨의 회고록을 둘러

싼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8년 8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회고록의 허위 사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올해 2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장기화 이어지는 동안 5·18 왜곡과 껍데가 반복될 수 있다며 신속한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5·18 껍데가 계속되고

있으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당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 광주 지역 국선변호인 경쟁률이 지난해 2대 1에서 올해 1.5대 1로 낮아진 점과 지역 법관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진출이 감소한 점 등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호남·충청권 교육감들 “교육교부금 안정적 확보해야”

교육청 국정감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남·충청권 교육감들이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노후시설 보수 등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려운 만큼 재정 배분 산식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수요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 부족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 2만 국정감사에서는 전남광주·전북·제주·충남·충북·대전·세종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학령인구 줄어도 인건비·학교 운영비 등 고정비 부담
고민정 의원 “사업 예산 수요 없이 정부안 반대” 비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정부의 새로운 산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예산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행 내국세의 20.7%와 연동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경우와 비교하지 않은 채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어난다고 답변했다”며 “교육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착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율을 연계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고정 산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교육청의 입장을 물었다.

김대중 광주특별시교육감은 “학생수가 감소해도 교사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노후시설 보수 등 고정비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워 정부안 개편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정부안 적용 시 올해보다 예산이 약 900억원 늘어나지만, 기존 방식으로 예상한 예산과는 1조 원가량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 감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미애 세종교육감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요청했다. 강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투자를 집중해야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며 “세종은 44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준비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전호성 전북교육감 역시 업무보고에서 “학생 수가 적은 전북은 교부금이 줄어들면 타격이 더 크고,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돼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재정을 두텁게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교부금 감소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별 영향과 예산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원을 몇 명 더 확충해야 하는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노후시설을 몇 개 학교에서 어떤 규모로 보수해야 하는지 보고한 교육청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거나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옛 전남교육청 국외 출장 관리 ‘부적합’

항공료 과다·환수 지연 지적
베트남 카지노 출입 의혹 제기

옛 전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심사 절차 위반과 항공료 과다 지급, 김대중 교육감과 직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의혹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옛 전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자료를 제시하며 출장 심사와 항공료 지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의 출장 10건 중 9건이 허가 신청 기한을 위반했고, 7건은 심사 전에 항공권을 발권했다”며 “사업 부서 국장이 10건 모두 직접 심사했고, 일부 출장에서는 심사위원회 규정보다 적게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항공료 과다 지급과 환수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출장 8건에서 항공료 2830만원이 과다 지급됐지만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환수됐다”며 “김대중 교육감이 현

금으로 받은 출장비도 9500만원에 이른 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과 직원들의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교육감과 직원 최소 3명이 한 여행사 대표와 베트남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적 업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한 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거둬 여행사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감사인 감사와 고발을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트로이대학교에 설치한 케이(K)-에듀센터의 운영 실적과 직원 파견의 적절성도 쟁점이 됐다. 강 의원은 “직원 3명을 파견했지만 업무협약 체결과 협의회, 공식 방문 외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육감은 국외 출장 규정 위반과 관련해 “지방선거 직전에 항공료 과다 책정 문제가 쟁점이 됐고, 사실을 파악한 뒤 환수 조치했다”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여, 메가프로젝트 이행 담은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52시간 노동특례 제외 법안도 함께 제출
한병도 “국회사 병합심사에 최종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지방중도성장법’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계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과는 별도로 초광역특구법의 최 대 쟁점 중 하나인 고소도·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

외한 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안은 당초 ‘메가 특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에 대한 특례를 담아 지방중도 성장의 틀과 열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재회의에서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 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 발의 법안은 주 52시간 근

로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른바 화이트칼라와 이그젠션과 관련, 신 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서 근로 시간과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서면합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게 열어둔 것이다.

법안은 특례의 적용 대상 직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상 등 서면합의의 사항,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안에는 노동시간 특례 외에도 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의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권전략산업 육성 및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유치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투자 등을 하는 특구기업에 대해 특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사업시행자, 특구기업 및 특구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 및 지방정부가 필요한 규제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포함됐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교육청 국감서 아동학대 사건 처리 개선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을 일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교육청과 경찰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건까지 검찰로 넘기면서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통합 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호남·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교육감들을 상대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교육청 조사와 교육감 의견이 첨부되고 경찰도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의견을 갖고 있음에도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처리가 길어질수록 교사의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2~3년 동안 종결되지 않으면 교사가 사건에 매여 수업조차 하기 어려워진다”며 “교사들의 숙원이 바로 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